



## 【산업자원부】

### 부품·소재 기술개발 1천328억원 투입

- 정부가 핵심 부품·소재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올해 1천328억원을 투입한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지난 4월 29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182개 기술개발과제에 작년보다 18% 증가한 1천328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술개발과제 대상 분야는 기계, 수송, 전기, 전자, 섬유, 화학, 금속 등 7개 업종이며, 이 중에는 차세대 성장동력 관련 과제가 14개 포함돼 있다. 산자부는 예산액 가운데 724억원을 신규 과제에 배정키로 하고 LCD 부품·소재 및 제조 장비 등 24개 대형 기술개발에 584억원, 중소·벤처 부품소재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한 투자기관 연계형 단독개발과제에 140억원을 각각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24개 개발과제는 수요기업이 기술 개발 시 관련 부품의 매입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구매의향서를 첨부토록 해 판로를 보장토록 했다.

중점 지원분야는 반도체·LCD 분야 제조장비,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대비를 위한 부품,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소재 등 3대 분야다. 이 장관은 “올해 착수되는 신규과제의 개발이 2008년 완료되면 9조8천200억원의수입대체와 1조600억원의 수출증대, 2만1천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고유가 대책과 관련, “현재는 공급차질이 발생하지 않아 수요억제정책보다는 가격정책으로 서민부담을 완화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며 “국제유가가 더 오르면 2단계를 고려할 수 있지만 가능한 이를 활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 세계 일류상품 생산 지정 중소기업 무담보 대출 등 특례보증 혜택

-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이라도 정부로부터 세계 일류상품 생산기업으로 지정되면 무담보 신용대출 등 특례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원자재 공급 불안과 관련 중소기업 긴급 특별경영안정자금 1천2백억 원에서 5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지난 4월 28일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무역업계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4일부터 신용등급 ‘BB+’ 이상 중소 일류상품 생산기업에 대해 기업은행이 무담보 신용대출을 제공해 왔으나 앞으로는 신용등급이 낮은 일류상품 생산기업에도 혜택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원자재 공급 불안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 애로 해결을 위해 현재 1천2백억 원인 중소기업 긴급 특별경영안정자금을 5천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가운데 원자재 구매자금 지원액은 올해 2천억 원에서 2천5백억 원으로 증액키로 했다.

이 장관은 또 정보통신 문화콘텐츠 비즈니스컨설팅 등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산업에 대한 조세감면 수기 등의 혜택을 제조업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며 “상반기 중 서비스 수출 활성화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역 지원방안으로는 무역금융과 KOTRA 무역협회 등을 통한 시장정보 제공 등 직·간접적인 지원책이 광범위하게 포함될 것으로 알려 장관은 ‘중소기업들이 잠재시장으로 급속히 부상중인 ‘BRICs 국가(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로 눈을 돌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시장동향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시장진출 전략을 세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광(光)산업 정밀측정기술 지원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윤교원)은 국가의 전략산업인 광산업 발전에 기본이 되는 반도체 광원(LED, LD)에 대한 정밀측정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광대역 광원 등 광산업용 주요 9개 측정기에 대한 교정기술기준을 개발하여 관련 산업체에 보급키로 했다고 지난 4월 26일 밝혔다.

이번에 보급되는 광산업 교정기술기준은 생산 및 관련기술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관련 측정기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동 측정기의 정확한 성능 발휘에 대한 확신을 주는 표준화된 교정기술기준이다. 동 기술기준은 필요로 하는 산업체 및 기술개발 연구계에 제공된다.

또한 동 기술기준은 전 세계 시험 및 교정기관에 적용되는 국제기준(SO 17025)에서 요구하는 유효성이 보장된 교정 시험방법 및 측정기술능력 보유 요건을 기본사항으로 담고 있어, 향후 기술표준원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시험소상호인정협정(ILAC-MRA)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행해진 시험·교정결과의 국제적인 통용이 가능하게 된다.

한편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광산업용 정밀교정기술기준의 보급을 위해 광 관련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을 위한 기술세미나 등을 통해 국제표준과의 소급성을 확립하여 측정 결과의 국제적 신뢰도 제고를 위한 조치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 신기술 인증업체 보증지원 확대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신기술 인증제품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신기술(NT), 우수품질(EM), 우수재활용(GR), 환경설비(EEC) 인증업체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 보증지원과 기계공제조합의 입찰·계약·차액·지급·하자보증을 지원한다고 지난 4월 26일 밝혔다.

기술신보의 기술평가 우대보증 대상으로 지정되면 기술력 위주의 약식심사를 거쳐 기업당 운전자금 3억원까지 우대지원되고 일반보증 대상은 1억원까지 지원된다.

기계공제조합의 지원대상은 종전 EM 인증에서 NT·GR·EEC 인증으로 확대됐으며 일반보증의 3분의1 수준의 수수료와 신용만으로 보증이 가능하다.

## 산학협력중심대학 10여곳 집중 지원

●● 교육인적자원부와 산업자원부는 권역별로 산학협력 중심대학 10여곳을 선정, 해마다 400억원씩 5년간 2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지난 4월 22일 밝혔다.

일반대학은 수도권과 강원권, 충북권, 대전·충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전북권, 광주·전남·제주권에서 1개씩 8곳을 뽑아 연간 30억~70억원씩 300억원을 나눠주고, 산업대는 권역별로 최대 2개 이내로 전국에서 5곳 안팎을 선정, 10억~40억원씩 1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정 사업이나 개별 프로젝트가 아닌 연구개발과 장비구축, 인력양성 등 사업패키지 형태로 지원되며 일반대는 산학협력 제도 도입 및 교육제도 개편, 산업대는 산학협력 역량 강화에 중점을 뒀 지원할 대학을 선정하게 된다.

산학 협력 중심대학으로 선정되면 ▲지역기업과의 기술개발 및 지도·이전 ▲지역기업 등과 활용 가능한 연구장비 구입 ▲지역산업에 필요한 인력 양성 ▲사업비·운영비 등 세부사업별로 지원 사업비를 자율로 편성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진다.

선정기준은 지역별 산학협력 중심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교육과정 개편(특성화 학과 육성과 교과목 개편, 계약형 학과 설치, 현장실습학점제 및 공학교육인증 추진 등) 및 교수 임용·평가 시스템 개선(산학협력 전담교수제 도입, 산업계 출신 교수임용 확대, 대학-산업체간 인적교류 확대 등) 전략의 평가로 할 예정이다. 한편 사업에 참여하려는 지자체와 산업체도 각각 5%의 현금을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일반대는 공대를 중심으로, 산업대는 대학 전체로, 대학 단독 또는 다른 대학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단을 구성할 수 있다.

교육부, 산자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학협력 중심대학 운영위원회를 구성, 이달 말 전체 대학에 사업설명회를 한 뒤 6월18일까지 이번 사업을 관리할 전담기관인 산업기술재단(www.kotef.or.kr)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받을 예정이다.



## 충청북도, 2004년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 3억 3천만원 지원

•• 충청북도에서는 지난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공개(경쟁)방식을 통해 2004년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을 신청 받은 결과 102개 민간 단체로부터 102건의 사업계획서(11개 유형)가 접수되어, 4월 21일부터 4월 22일까지 이들 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거 관계전문가 등 민간 인으로 구성된 충청북도 공익사업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모두 97개 사업에 3억 3천만원을 지급한다.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은 완전 배제시키고 도의회 추천 3인, 민간단체 추천 12인 등 모두 15인의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원사업에 대한 심사·선정의 내용과 과정은 심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령 제8조의 심사항목(11개 항목)에 대한 복수심사 제를 도입, 사업유형별 분과회의 및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사업을 선정했다.

앞으로 충청북도는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5월 중에 지원총액의 80% 상당을 지원할 것이며, 9월 중간평가 이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되 보조금 적정집행여부와 사업목표를 벗어나는 사례가 없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충청북도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12조에 의거 사업계획서상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을 경우는 해당 보조금을 환수한다고 밝혔다.

##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소규모 수출 중소기업 등 세무조사 제외

•• 경기지역 내 소규모 수출중소기업과 지식기반서비스기업, 창업 3년 미만 중소기업 등은 앞으로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상시근로자수의 10% 이상을 신규 고용하거나 고용계획이 있는 기업도 국세청에 신청하면 2005년 말까지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김정복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지난 4월 29일 수원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수원지역 중소기업인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창출을 당부했다. 김 청장은 또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구조조정 등의 어려움이 있거나 CEO의 장기출장 등으로 조사받기가 어려울 경우 신청을 받아 세무조사를 연기하겠다고 덧붙였다.

## 기술신용보증기금, 올 해 만기 벤처 채권 은행 보증 전환

•• 올 연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2조2천억원 규모의 벤처 프라이머리 채권 담보부 증권(CBO) 중 일시 상황이 어려운 1조원 안팎이 은행보증으로 전환된다.

기술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지난 4월 28일 "연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프라이머리 CBO로 자금을 조달했던 벤처기업 중 상당수가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제하고 "조사를 거쳐 일시 상황이 어려운 기업들에 대해서는 기신보가 보증을 제공해 은행 대출로 전환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은행 보증 전환 규모가 현재 추산으로는 8천억~1조원 내외가 될전망"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1년에 발행된 벤처 프라이머리 CBO는 5월17일 4천억원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5차례에 걸쳐 2조2천억원의 만기가 돌아올 예정이다. 기신보는 이중 벤처기업들의 경영난으로 현재까지 5천억원의 손실이 난 데 이어 연말까지 손실 규모가 6천255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손실 금액과 은행 보증 전환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금 사정이 양호한 기업들이어서 상황이 가능할 것으로 기신보는 보고 있다.

기신보 관계자는 "벤처 프라이머리 CBO의 경우 기신보가 전액 보증을 제공했으나 은행 보증으로 전환할 경우 85% 안팎의 부분 보증이 되기 때문에 기신보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고 말했다.



## 【중소기업청】

### 정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제품 구매 대폭 확대

●● 중소기업청(청장 유창무)은 '04년도에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지난해보다 15% 증가한 51조 5,917억원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지난 4월 28일 발표했다.

중소기업청은 “'04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04.4.20)됨에 따라 지난해 구매계획 44조 8,360억원 대비 15.1%(6조 7,557억원)증가한 51조 5,917억원의 중소기업제품을 금년도에 국방부, 조달청 등 98개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구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의 판매부진 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구매계획의 62.9%인 32조 4,655억원을 98개 공공기관에서 구매토록 함으로써 내수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 '04.3)됨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태조사를 금년 하반기 중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하는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제도 실효성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다.



### 974개사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 중소기업청은 지난 4월 27일 974개 중소기업을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대상으로 추가 선정했다.

중기청은 올해 1차로 1,540개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으며 올해 4차례에 걸쳐 모두 3,600여개 업체를 지원(예산 191억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수입국이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받는 데 필요한 인증획득업무 대행기관 이용비용을 50%(최고 1,000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다.



### 중소기업·벤처 M&A 최고 500만원 지원

●● 경기중기청과 인천중기청은 중소기업·벤처기업의 M&A를 지원하기 위해 최고 500만원까지 M&A컨설팅비용을 지원한다고 4월 23일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M&A컨설팅 지원사업은 소규모·미공개 기업들이 전문 컨설팅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M&A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재무제표상 순자산액이 30억원 이하인 비상장·미등록 중소벤처기업이 대상이다.

해당 기업은 M&A 컨설팅(중개)기관과 정상적으로 3개월 이상 기간으로 컨설팅이나 중개계약을 체결할 경우 한국기술거래소의 심사를 거쳐 컨설팅 착수금의 50% 이내에서 건당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문의:중기청 창업벤처정책과(042-481-4387) 또는 한국기술거래소 M&A사업본부(02-6009-4305).

# NEWS

## 정부 · 열린우리당, 중소기업 정책자금 6천억원 확대

●● 정부와 열린 우리당은 지난 4월 21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6천억원 확대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근태 원내대표, 정세균 정책위의장과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회의를 갖고 구조개선자금 4천억원, 소상공인 지원자금 1천억원, 창업자금 600억원, 수출금융자금 400억원 등 정책자금 지원을 6천억원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또 중소기업 보증공급을 3조원 확대키로 하고,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금리를 현 4.9~5.9%에서 0.5~1% 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당정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특별조치법을 제정, 중소기업이 업종이나 품목 등 사업을 전환할때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책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대형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국내 기업에 원스톱 서비스 등 외국 기업에 제공하는 수준의 지원을 약속하고, 생산성 협약 임금제를 제도적으로 확산시키기로 했다.

또 총선공약인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을 제정, 중소상인의 상권을 보호하고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유통물류진흥원을 설립키로 했다.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2천억원 규모의 원자재구매 지원자금과 1조원 규모의 원자재구매자금 특례 보증도 확대할 방침이다.

## 국세청, 모범성실납세자 정책자금 지원 우대 추진

●● 모범성실납세자와 모범 세무대리인으로 선정되면 중소기업 정책 자금 지원이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에서 우대받게 된다.

또 개인 세무대리인 나외에 전업 세무대리 법인도 모범 세무대리인 선정 대상에 포함된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지난 4월 27일 국세청 강당에서 모범성실납세자 18명과 모범 세무대리인 12명 등 모두 30명에게 모범성실납세자 및 모범 세무대리인 지정서를 수여했다.

국세청은 모범성실납세자와 모범 세무대리인에 대해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 기존 혜택 이외에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및 신용보증기금 보증에서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환경부, 환경전공 대졸자 채용 기업에 장려금 지원

●● 내달부터 환경관련 전공 대학졸업자나 졸업예정자들을 채용하는 기업체에 취업장려금이 지급된다.

환경부와 각 시·도의 지역환경 기술개발센터는 5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취업장려 대상자로 선정된 환경관련 전공 대졸자나 졸업예정자 250명 중에서 인턴사원을 뽑는 기업체에 대해 2개월간 1인당 월 60만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환경산업 인턴십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지난 4월 24일 밝혔다. 또 기업체가 인턴사원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면 역시 2개월간 1인당 월 60만원의 취업장려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체나 기관, 취업희망자는 오는 26일까지 각 시·도의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